

농민 정치적 진출 본격 시동

전국 단일 조직 전농 출범 의미와 전망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식 출범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전국농민운동연합(전농련)과 전국농민협회(전농협), 개별적인 군농민회로 분립해 있던 농민조직이 하나로 합쳐진다.

해방 직후 3백여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가입했던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 와해된 이래 최대 규모의 농민조직이 건설되는 셈이다. 현재 전농에 가입할 뜻을 밝힌 군농민회는 전국 1백37개군 가운데 1백5개군(광주시

2개구 포함)에 이르며 전국 1백20만 농가 중 약 5만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2일 충북도연맹 준비위가 결성된 이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전농의 결성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본격화되고 농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90년대를 맞아 변혁운동 세력으로서의 농민조직의 위상을 확립해나갈 전망이다.

70년대 가톨릭농민회(가농)와 기독교농민회(기농)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험과 과제를 토대로 결성된 전농은 자신의 성격을 △합법적 공개대중조직 △군농민회 주체의 원칙 △빈·소농 주도의 원칙 △변혁적 성격 지향 등으로 규정짓고 있다.

전농 준비위 노금노(41) 사무국장은 "70, 80년대를 통해 농민운동은 소수 활동가 중심을 벗어나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농민문제의 근본적

의 연대 등 19개항에 이르는 강령을 마련해 놓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소농을 농촌에서 쫓아내고 농촌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독점자본의 농촌 침탈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라고 보고 이의 철회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면 단위 확

전노협등 운동단체와 연대 변혁 추구 대중성 확보가 과제... '농어촌대책' 철회요구

한 농민운동은 성장 위주의 공업화정책 속에서 소외된 채 몰락해 가는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결집,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켰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변혁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경자유전

대 실시와 쌀값 보장을 위한 추곡수매액 예시제 실시의 관철 등을 쟁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농민들의 정치적 진출을 목표

계를 정비하고 △고립분산적인 농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고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전농은 지난 2월13일 준비위를 구성한 이후 "민자당 창당에 따른 변화된 정세속에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일치단결해 통일된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른 운동단체들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이뤄나간다는 입장에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민부문의 연대사업은 전농준비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 2월13일 제3차 대표자회의 때까지 참여해 오던 전농련을 대신하여 같은달 27일의 대표자회의부터는 준비위가 정식 참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농은 24일 결성대회에서 '제민족민주운동과의 연대방안'이라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통해 기존의 연합단체인 전민련에의 참가 여